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강 근 형*

I. 머리말

2차대전 이후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새롭게 부상한 소련 공산주의를 봉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적인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것은 정치·군사면에서 서구에서 NATO를 설립하였고, 동아시아에서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소련·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의 침투에 대한 방위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경제면에서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형성하여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이른바 IMF-GATT체제를 출범시킴으로써,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결성되었다. 따라서 NATO, 미·일 방위조약, IMF-GATT체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담보하는 3두마차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헤게모니체제는 7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미국의 마샬 플랜 등 전후복구 사업에 힘입어 새로운 경제강국으로 등장한 서독과 일본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경제면에서의 헤게모니의 쇠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71년의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와 그 이후 계속되는 미국 달러화의 약화 현상에서 보여졌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국방력 강화정책은 군사비의 증액으로 인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그 적자분을 일본의 대미 투자증가와 공채매입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본은 전후 40년동안 미국의 안전보장하에서 GNP의 1%미만 만을 국방비

* 제주대학교 교수

에 투자하고, 모든 힘을 경제성장에 쏟아 넣음으로써,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과 최대 채권국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일본은 동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엔블록(Yen Bloc)을 형성할 정도로 힘의 중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의 금액도 이제는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제1의 원조국이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막강한 경제력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2년에 일본은 PKO법안을 통과시켜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련의 변화와 동구 공산국가의 자유화로 말미암아 냉전기에 중요했던 이념이나, 군사력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냉전 종식 이후 경제력이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해지고 있다.¹⁾ 즉, 힘의 자원의 중요성이 군사력으로부터 경제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 속에서 수동적인 노선을 고수하며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점차 독자노선을 추구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형성될 신국제정치질서 및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변화양상에 주목하여 다음의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외교정책의 기본성격을 고찰한 후, 그 변화양상을 국제적 역할 중대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둘째, 일본의 역할 중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인가를 고찰해 보고, 셋째 이러한 일본의 위상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규명해보려 한다.

II.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성격과 변화양상

1.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성격

외교란 국가간의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제반활동을 말하는데, 이러한 활동 가운데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책이 곧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다.

1) 냉전 종식 이후 국가 안보에 있어 경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 논의는 다음 참조. C. Fred Bergsten, "The Primacy of Economics," *Foreign Policy*, No. 87 (Summer 1992), pp. 3~24.

따라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내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타국의 외교정책 및 국제환경에 의해 크게 결정지워진다. 특히 전후 일본의 경우 패전국으로서 승전국인 미국의 심대한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환경적 요인이 일본 외교정책의 성격을 좌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처한 국제환경은 일본으로 하여금 민족주의적인 폐쇄성향으로 고착시키기 보다 그의 생존을 위해 국제주의적인 성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에 의한 군사적인 안보와 경제적인 의존성을 탈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²⁾ 이와 같이 일본의 대외관계를 결정짓는 데 있어 국제환경적 요인은 안보적인 고려와 경제적인 대외의존성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이 두 요인을 중심으로 일본 외교 정책의 기본 성격을 고찰해보자.

우선 안보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2차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게 패배한 이후, 일본 열도는 미국이 점령하게 되었고, 점령초기에 미국은 일본에 대해 비군사화와 민주화의 2대 정책노선을 추구하였다.³⁾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①무장해제 및 군국주의 초국가주의의 말살, ②전쟁범죄자의 지명과 처형, ③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신장을 장려하고, 경제적으로는 ①일본 중공업의 규모와 성격을 평화적인 수요에 한정시키기 위해 군수공업 및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재벌의 해체, ②경제적 비군사화, 노동·산업 및 농업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세력의 신장 ③평화적 경제활동의 재개, ④배상 및 침략재산의 반환, ⑤재정, 화폐 및 은행정책의 민주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치안유지법과 같은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장교를 포함하여 군국주의자들을 공직으로부터 추방하였다.⁴⁾

헌법적 차원에서도 ①참정권 부여에 의한 부인의 해방, ②노동조합의 결성 장려, ③학교교육의 민주화, ④비밀심문 및 민권제한 제도의 철폐, ⑤경제 제기관의 민주화 등의 5대 개혁과 일본 헌법 전문의 평화주의선언과 제9조로 규정한 전쟁권의 폐

2) 오기평, "일본의 외교정책," 현대일본연구회 편, 「일본정치론」(서울: 박영사, 1983), p. 256 참조.

3) 전후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점령정책이 일본의 보수세력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논의는 최상룡, "전후 일본 보수세력 형성의 국제적 요인," 현대일본연구회 편, 「자민당의 장기 집권연구」(서울: 한길사, 1982), pp. 93~134 참조.

4) 猪木正道·楠川信彦 編, 「現代日本の政治」(東京: 潮山出版社, 1968), p. 6.

기 및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했던 것이다.⁵⁾ 이러한 조치들은 전쟁과 군비를 반대하는 비무장 평화주의와 어느 국가와도 적대관계를 피하려고 하는 중립주의의 무드를 형성시켰으며, 사회주의 정치가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미소간의 냉전의 고조와 함께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도 근본적인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미국은 일본을 냉전의 전초기지 또는 경제기지로 만들기로 하고 정치력의 보수화와 재군비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일본으로부터의 안전보장(적대관계)에서 일본과의 안전보장(우호 또는 동맹관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안보논쟁의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은 미소냉전은 더욱 가열화 시킴으로써,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반공정권에 대한 원조를 강화시키고, 일본을 미국의 미·소방위체제에 편입시키려는 데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즉, 한국전쟁으로 인한 미소대립의 격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서방진영에 편입시키도록 했고, 그와 관련해서 대일강화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했던 것이다. 미·일강화조약은 1950년 6월과 1951년 1월, 2회에 걸친 덜레스(F. Dulles)의 방일을 거쳐, 1951년 7월에 강화조약의 최종안을 각국에 발송했고, 이어 같은 해 9월 4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체결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미·일안보조약이 1951년 9월 8일 조인되었고, 그 이듬해 1952년 4월 미·일행정협정과 함께 발효되어 미국의 대일점령은 끝났다.⁶⁾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미·일안전보장조약이 동시에 성립한 것은 하나의 동맹의 성립이요, 미국이 일본을 하나의 진영으로 완전히 흡수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미·일안보체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안전보장을 달성하는 냉전논리적 안보론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일본헌법 9조에 의해 전력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미소세력의 접경지대이며 국내 혁명세력을 통한 간접침략

5) 김용서, "일본방위논쟁의 현실적 여건과 현실적 구조," 「현대일본의 정치」(서울: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1986), p. 89.

6) 최상룡, 앞의 글, p. 53.

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적 보장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보수주의 세력들은 평화론자들이 내세우는 중립의 방법은 세가지 점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로 세계의 양극화(냉전)현상에 의하여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계의 대표적인 중립국가들은 대체로 국토나 인구의 규모가 작은 약소국이며, 따라서 일본과 같이 선진화된 공업력과 정보력 및 지정학적(전초적) 위치를 가진 나라는 양극세력이 중립적 지위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중립국이 되기 위하여는 외국군의 주둔이나 외군기지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군비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군비 국가에서 외국군의 보호 조치까지 제거한다는 것은 반대세력(공산주의세력)에게 침략의 유혹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파국을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중립주의는 모든 국제적 분쟁에의 불개입, 즉 방관자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분쟁에 공동으로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억제하려는 유엔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이른바 부작위의 무책임이라고 공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미소의 대결을 완화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미소의 양극화로부터 초연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중립주의는 이상에 불과하고, 중립의 이상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력이나 국제적 보장이 필요하며 미·일안보협력은 그러한 방법 중에서 일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⁷⁾

이와 같이 2차대전후의 국제환경, 즉 패전한 일본내의 비군사화의 무드와 미국점령으로 군비권과 교전권을 포기한 평화헌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하에서, 침해화되는 미소냉전을 의식하면서 일본의 보수적 지도층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미·일안보체제 속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미국이 지니는 절대적인 군사력의 우위 속에서 「고립된 평안」(isolated comfort)을 만끽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GNP의 1%이내), 그 여력을 경제부흥과 발전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7) 朝日市民教室, 『日本の安全保障 2: 1970年の政治課題』(東京: 朝日新聞社, 1967), pp. 59~69; 芦田 均, “永世中立不可能論,” 『文藝春秋』(1950年 7月) 참조; 김용서, 앞의 글, pp. 101~102 참조.

8) 김용서, 앞의 글, p. 102.

이러한 경제우선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 「요시다독트린」⁹⁾이다. 미군점령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경제부흥을 이룩하기 위해 국력을 경제발전에 집중시키는 「경제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위해 친미노선을 추구하였다. 이의 핵심은 미·일 안보조약을 바탕으로 일본의 미군사기지의 설치 및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여 일본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의 재무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론분열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우산하에서 경제성장을 우선 추구한다는 요시다의 노선은 일본의 보수본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요시다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계속 유지되면서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 전략의 근간으로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경제적 대외의존성이 외교정책에 어떠한 성격을 창출시키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자. 일본은 전세계 육지면적의 약 0.3%에 불과한 370,000km²의 면적을 갖는 도서국가에 불과하다. 또한 인구는 1991년 현재 약 1억 2천 380만 명으로 이는 세계 인구의 약 2.6%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1991년도 일본의 국민총생산(GNP)은 2조 9,020억 달러로서 세계전체 GNP의 15%에 달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GNP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중 석유의존률이 77.6%이고, 석유수입량은 총석유소비량의 9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경제구조가 대외의존적임을 말해준다. 일본의 경제구조가 의존경제라는 말은 원자재의 수입량이 어떤 특정산업의 수출용 상품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수입량과 그 구성비가 같거나 또는 그 보다 클 때, 이를 의존적인 산업이라 분류하며, 이러한 분류방법에 따를 때 일본 총수출의 70% 이상이 의존적 산업구조에 의해서 생산된다고 한다.¹⁰⁾

이렇게 높은 원자재의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 있어서 그들의 안보는 결코 영토상의 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안보도 역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여기에 일본의 안보와 경제적인 이해가 직결되고 있으며, 이는 곧 일본의 대외관계의 행태를

9) 요시다 독트린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吉田 茂, 『世界と日本』(東京: 番田書房, 1963), p. 168; 五十嵐武士, 『對日講和と冷戦: 戦後 日米關係の形成』(東京: 東京大學校出版會, 1986), pp. 156~60.

10) Leon Hollerman, *Japan's Dependence on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 19~24.

조건짓는 이유가 된다.¹¹⁾ 예컨대,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해상수송로(sea lanes)의 확보는 일본의 안보 및 경제에 사활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이다. 특히, 1973년 석유위기(oil shock)는 일본의 경제와 대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 바,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천연자원의 저렴한 공급이야말로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즉, 많은 제3세계 자원보유국들이 자원민족주의를 강력히 천명함에 따라 일본은 이들과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경제의 대외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외교정책이 대외개방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원자재의 안전확보와 수출품의 시장확보를 위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전방위 외교를 추구하게 했던 것이다.

2.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양상 : 국제적 역할 증대 모색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전후 미국의 안보우산하에서 「경제제일주의」의 요시다 독트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제2의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세계의 최대 최권국으로 등장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막강한 경제력을 특히 동아시아지역에 대해 집중 투자함으로써 엔 블록을 형성하는 한편,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함으로써 정치·경제적 발언권과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힘이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국제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게 될 것인 바, 이는 이미 경제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자원과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1990년 들어 일본은 「환동해(일본해)경제권구상」을 제안했던 것이다. 정치면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미·일안보체제의 보조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구상에 의한 군사노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적 군사대국으로 등장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보자.

11) 오기평, 앞의 글, p.258.

가.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는 자국이 수출확대와 자원확보를 위하여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외국인조 기금은 1957년 태국, 말레이시아의 식민지 부상책으로 배상대신 엔차관으로 지불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77년 당시 후쿠다 수상이 일본은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전방위외교(Multi-directional policy)에 역점을 둔다고 선언한 이후, 외국인조 기금은 동남아에서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또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후 신냉전체제하에서는 이 기금이 파키스탄, 터키 등을 지원하는 등 전략적 원조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81년 8월 한국이 한·일외상회의에서 안보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결부시켜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1982~87)의 추진을 위해 요청하였던 60억 달러의 정부차관 가운데 한국이 수령한 40억 달러도 외국인조 기금이였다.¹²⁾

일본은 1988년 대외개발원조(1988~93년까지 5개년 계획)로 500억 달러를 책정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국가 등 저개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¹³⁾ 즉, 1992년 일본은 개발원조계획의 중점을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두어 「아시아 중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국가들에 대한 수출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점증하는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해 일본 주도의 경제권 형성을 준비하려는 전략적 측면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등장 이후 군사력이 대체성(fungibility)이 낮아, 과거보다 국가의 힘(power)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한다.¹⁴⁾ 상대적으로 경제력은 대체성이 높아, 이에 입각한 외국에 대한 경제적 시혜(원조)능력은 영향력을 높이는 데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의 대개도국 개발원조는 경제·정치적 발언권과 영향력 증대를 위한

12) 민족통일연구원,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동북아질서」, 연구보고서 92-04(1992년 10월), pp. 14~15.

13) Xiaming Zhou,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Asian Survey*, Vol. 32, No. 4 (April 1991), pp. 341~50; Dennis T. Yasutomo, "Why Aid? : Japan as an 'Aid Great Power'," *Pacific Affairs*, Vol. 62, No. 4 (Winter 1989/90), pp. 490; Tsuno Akada, "Japan's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31, No. 4 (April 1991), pp. 324~40 참조.

14) David A. Baldwin, "Power Analysis and World Politics : New Trends versus Old Tendencies," *World Politics*, Vol. 31, No. 2 (Jan. 1979), pp. 163~175 참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일환으로 기뢰 제거를 위하여 해상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할 당시 자위대의 제3국 기항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대부분의 기항지가 터키, 파키스탄 등 대외개발원조의 수혜국으로 결정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물론 일본내에서도 이상주의적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과 경제 운용 능력을 활용하여 저개발국들의 경제발전, 세계각국에서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신장, 군축, 환경보호 등에 이바지하여, 이른바 「평화발전을 위한 엔화의 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이런 부문의 정책추구를 통하여 일본의 도덕적·정치적 위신을 높여 보겠다는 실리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일본 주도의 지역경제권 구축 노력

냉전의 종식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경제력 증시 추세로 말미암아 자본, 노동, 자원 및 기술 등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의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응하여 동북아시아에서도 지역경제권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은 첫째,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의 광둥성과 복건성을 연결하는 「화남경제권」, 둘째,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의 극동 그리고 중국의 동북지역 등을 연결하는 「일본해(동해)경제권」, 셋째, 중국의 황해에 면한 지역과 남북한의 서해안지역 및 일본의 구주지역을 포함하는 「황해경제권」, 넷째, 동남아국가연합국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자유무역연합」 또는 「동아시아경제구름」(EAEG) 및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등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두만강 유역에 대한 개발 문제를 국제연합개발기구가 주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실천단계로 발전되고 있어서 지역개발 및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 국가들간의 국경을 넘는 투자 및 교역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역내국가들간 자본과 기술의 이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역내 유일 선진국인 일본의 경제적 주도권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Shafiqul Islam, ed., *Yen For Development : Japanese Foreign Aid and the Politics of Burden-Sharing* (New York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1), p.8.

일본은 1966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모델로 한 「태평양자유무역지대」(Pacific Free Trade Area)안을 구상한 바 있다. 이 구상은 태평양지역 선진제국인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가맹국으로 하는 관세통합안이었으나 다른 나라들의 거부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1979년 오오히라 수상은 동아시아·태평양구상 구상의 일환으로 「환태평양연대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은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제시한 자원·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종합경제전략인 동시에 안보전략의 핵심구상이었다.¹⁶⁾ 이러한 구상은 아·태국가와의 경제적 유대의 결성을 통하여 소련의 아시아 진출과 동남아시아에서의 공산화 파급을 저지하고 동 지역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내에서는 「환일본해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환일본해란 한국, 일본, 북한을 주요 구성국으로 하여 일본해를 공통의 내해(内海)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역(특히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지방, 사할린주, 아무르주)과 중국의 동북삼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북아시아경제권」에 속한다.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환일본해경제권」은 현재 아시아의 육지 면적중 약 20%, 전 인구의 약 10%(약 2억 9천만명), 그리고 대략 3조달러에 달하는 국민총생산액이 집중되어 있는 대경제권이다.¹⁷⁾

「환일본해경제권」은 일본이 이 지역에 있어서 자국의 고도 기술과 자본, 한국의 기술과 자본, 러시아 극동의 풍부한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 비철금속, 목재, 수산물), 중국의 농산물과 노동력, 북한의 광산물과 노동력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호혜의 원칙하에 협력과 국제 분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냉전 종식으로 역내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블라디보스톡 연설(1986.8)에서 소련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선언하고, 극동지방의 경제발전을 일본을 필두로 하는 태평양 제국의 거대한 경제력과 연계할 것임을 밝혔던 것이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동경 방문에서도 「동북아시아협력지대」의 창설을 제창하고, 이 협력지대가 태평양

16) Tsuno Akada, *op. cit.*, pp.324~327 참조.

17)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58.

지역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¹⁸⁾

이러한 지역경제권 형성 구상은 경제블록화 추세에 따라, 특히 EC의 통합과 NAFTA의 결성이 가속화될 경우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서구 및 미주의 지역주의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미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구상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반대를 의식, 1991년 11월 와타나베 일본 통산성장관은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역내의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전제로 한 「자유무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주창하였다. 일본은 EAEC처럼 미국을 제외시키는 아시아 국가만의 배타적인 지역경제협력체 구상에는 미국의 반대를 의식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입장이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일본은 상기한 바와 같은 아시아에서의 지역경제협력체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자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지역경제권을 창설·주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견제와 의구심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력, 즉 정치적인 이미지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겠다.

다.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와 유엔상임이사국 지위 확보 노력

2차대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조는 미·일협력체제를 주축으로 한 「비군사적 경제외교」였다. 이러한 전통은 1970년대 이후 전방위평화외교를 수행함으로써 계속 유지되어 왔다. 걸프전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대외정책의 영향으로 국회에서의 평화헌법 논쟁과 여론을 통해 미국의 참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전비 126억달러만을 부담하는 안이한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전쟁에의 참여를 금전으로 부담한다는 일본 특유의 논리가 국내적으로 효력이 있었으나, 국제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었다. 126억 달러라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서방국가들로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걸프전 이후 전승국들의 전후 처리과정과 전쟁복구 사업에서 일본은 소외당하였

18) 앞의 책, pp.58~59.

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걸프만에 소해정선단을 보냈고, 캄보디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법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분쟁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포함한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 법안은 1991년 12월 3일 중의원을 통과한 후, 1992년 참의원을 거쳐, 6월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으로 최종 성립되었다. 법안의 참의원 통과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자위대 파병은 주력부대(전투부대)의 파병이 아닌 후방부대의 공병, 병참, 통신업무 등에 국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 파병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평화유지군의 전방업무 참여를 보류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3년 후 완전 재검토하기로 한 점 등이다.¹⁹⁾

이러한 일본의 결정은 냉전 종식후 위상이 높아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적 역할을 높이려는 전략적 결단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캄보디아, 잠정행정기구의 대표에 일본인 아카시 야스시의 취임, 「캄보디아 국제부흥회의」의 동경 개최 추진, 그리고 캄보디아에 대한 40억엔의 대외개발원조 제공 결정 등은 미야자와 일본 수상이 1993년 1월 16일 방콕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도차이나 재건 전략 수립을 위한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설치 제안과 관련하여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를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려는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²⁰⁾

한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 노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의 확보 노력에서도 볼 수 있다. 미야자와 수상은 1992년 2월 1일 유엔에서 일본 정부의 영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1997년경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²¹⁾ 일본은 최근 일곱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피선되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상임이사국의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 왔는 바, 걸프전을 계기로 지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유엔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 유엔의 제도적 장치 안에서 일본

19) 앞의 책, pp.38~39; Aurelia George, "Japan's Participation in U.N. Peacekeeping Operation," *Asian Survey*, Vol. 33, No.6 (June 1993), pp.561~575 참조.

20) 외교안보연구원, 「「미야자와 독트린」과 일본의 아·태지역 정책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1993년 2월 17일, p.2.

21) 「朝日新聞」, 1992년 2월 1일.

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의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정세변화를 주장한다. 즉,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소련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유엔체제는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타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 2,3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유엔헌장 제53조의 「적국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1991년 9월 나카야마 일본 외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른바 같은 적국인 독일, 이탈리아에 공동보조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독일은 시기 상조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독일은 1990년 통일로 민족적 염원을 이루었으므로, 헌장 개정으로 주변국의 경제심을 불러 일으키기보다는 현실적인 면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²²⁾

또한 일본이 적국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엔에 대한 일본의 분담금과 관련되어 있다. 1991년 일본의 분담금은 1억 5백만 달러로 미국의 2억 7천 2백만 달러에 이어 두번째이며 유엔의 PKO활동비의 12%를 분담하고 있으므로 유엔에서 적국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적국조항 삭제 의도는 현존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를 와해시켜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일본은 냉전 구조의 붕괴와 함께 주요 국제문제에 유엔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것을 감안, 적극적인 유엔 공약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²³⁾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볼턴 미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는 1992년 3월 25일 하원의교위원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22)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p. 41~42.

23) 앞의 책, pp. 42~43.

취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인적 공헌 및 자금 동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대개도국 경제적 원조를 활용하여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계속해서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추구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일본의 군사대국 지향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자와 안전보장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국 경제력의 약화와 소련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게 경제력에 상응하는 안보 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전 유지에 있어 일본의 정치적 역할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은 80년대 이후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고 방위비 증액요구를 지속해왔던 것이다. 일본은 지역 강대국으로서 이러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의 증대요구를 수용하고, 공산권의 붕괴로 야기된 소·중·북한의 국내정세 불안을 이용하면서, 미·소의 군사력 감축에 따른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정책은 전후부터 70년대까지 미·일동맹체제 하에서 「전수방위(專守防衛)」 전략이 그 근간이 되어 왔다. 이것은 상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것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한되며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변화하게 된다. 스즈키 수상은 1981년 중전의 200해리(본토서남) 해상방위에서 탈피하여 「1000해리 해상수송로(sea lanes) 방위」를 선언하였는 바, 이는 「전수방위」 전략에서 「지역방위」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²⁴⁾ 1983년 나카소네 수상은 일본 주변의 3개 해협(소야, 쓰루가, 쓰시마)의 봉쇄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해협 봉쇄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노력의 일환으로 유사시 소련 태평양함대를 동해(일본해)에 묶어 놓고 미국은 태평양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미국의 대소봉쇄전략에 일본

24) Reinhard Drifte, *Japan's Foreign Policy* (New York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0), p. 39.

이 적극적으로 가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련은 3개 해협 봉쇄로 태평양 진출을 봉쇄당한 반면, 일본 역시 해상을 통한 연간 6억톤 이상의 물량 수송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정책은 종합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원유시장의 확보라는 사활이 걸린 정책이며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1985년 나카소네 내각이 채택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1986~1990)은 일본의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서, 장비나 무기는 군수방위용을 넘어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이 계획의 총경비는 18조 4천억엔으로 이 기간중(1987) 방위비가 GNP 1% 한도를 초과하였다.²⁵⁾

더우기 일본은 1991년 예산에서 방위예산을 5.8% 증액시켰으며, 1992년도 방위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38% 늘어난 4조 6천220억엔으로 책정되었다. 일본의 방위비는 현재 세계 3위로 국민 총생산의 1.5%에 이르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1991년에서 1995년까지 신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22조 7천5백억엔을 들여 호위함 현대화, 핵무기 탑재가능 최신 미사일 도입, F-15 국산화 등을 서두르고 있다.²⁶⁾

현재 일본 자위대 관계자들은 세계 제3의 방위비의 허상을 주장하며 더 많은 증액을 요구한다.²⁷⁾ 즉 방위예산의 4할 이상이 인건비이며, 피복비와 행정비를 제외하면 장비구입과 훈련에 투입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타국과 비교하여 소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의 1%로 제한하고 경제성장률은 3~4%, 환율을 달러당 90~130엔으로 상정하더라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군비증강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미 달러에 대한 환율 110엔 대에서 1990년대 일본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4%, 1%로 가정할 경우 2000년대의 미국과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각각 5조 8천억 달러, 6조 2백억 달러가 되어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미국을 앞지르게 된다. 1990년 미국의 국방비는 2,868억 달러, 일본의 방위비는 283억 달러로 일본의 방위비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비는 96년에 2,228억 달러로 추정

25) *Ibid.*, pp. 34~35.

26)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 49.

27) 일본 방위비의 허와 실에 대해서는 현인택, "일본의 파워: 그 허상과 진실," 『제간 사상』 (1991년 여름), pp. 208~210 참조.

되고 있는데, 이는 1990년에 비해 실질액수로 23% 삭감된 것이다. 2천년 미국의 실질방위비는 1,831~1,922억 달러 정도로 산출되어 진다. 반면 2천년 일본의 국민총생산을 6조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그 중 1%를 방위비에 투입할 경우, 방위비는 600억 달러가 되며, 이는 미국 방위비의 3분의 1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²⁸⁾

일본이 본격적인 항모 또는 원자력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헌법문제, 국내정치문제 그리고 미국 및 인접국의 반대 등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2000년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진다. 만약에 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면 일본은 2천년에 25만 규모의 병력과 막강한 육·해·공군력을 갖추고 태평양 지역에서 미·일안보체제하의 보조적 기능에서 벗어나 군사적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지역 군사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방위전략도 점차적으로 「전수방위」에서 「지역방위」로 전환한데 이어, 세계적 차원인 「진진방어」전략으로 전환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점차 아시아의 중요성을 경시하여 안보공약을 약화하거나 중국이 계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거나 북한이 핵개발을 명실공히 추진한다면,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노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본은 핵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²⁹⁾ 기왕의 「비핵3원칙」이 있으나 일본정부는 요코스카, 사세보 등 항구에 기항하는 미국의 군사용 선박들의 핵 탑재여부를 불문에 붙여왔다. 또한 일본은 유사시 핵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운반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핵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 개발 바로 전단계까지 모든 분야의 핵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 필요할 때 핵무기에 전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번 다

28)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p.80~81.

29) 일본의 핵연료 획득과 핵개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Peter Dauvergne,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Japan," *Asian Survey*, Vol. 33, No. 6 (June 1993), pp. 576~591; Richard J. Samuels, "Consuming for production: Japanese national security, nuclear fuel procurement, and the domestic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3, No. 4 (Autumn 1989), pp. 625~646.

량의 플루토늄을 일본으로 반입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징후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역할을 발휘하기 위하여 오늘날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치·군사적 정책 양상을 국제적 역할 증대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정책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본 내의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역할 증대 움직임이 일본내에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고찰해 보기로 하자.

Ⅲ.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와 아시아집단안보기구의 필요성

신보수주의는 기존의 보수지향적인 맥락에서 정치·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민족주의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역할 증대(PKO 파병 등)를 모색하려는 1970년대 말부터 비롯된 새로운 사조이다. 오오다케 히데오는 신보수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 대외적 전통주의(민족주의), 사회적 자유주의로 보았으며, 여기에 나카소네의 일본의 국제화 국가의 의지를 추가시켰다.³⁰⁾ 이러한 신사조 형성에는 나카소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신보수주의가 일본의 지배적 사고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82년 11월 나카소네 내각의 성립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당시 나카소네가 쓴 「새로운 보수의 논리」라는 책에서 그는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정치는 국내문제 본위의 타성에서 벗어나 보다 크고 활력이 넘치는 세계를 향하여 전향할 시기이다.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요청되는 시기로 본다. 그것은 보수 통치의 부활이고 통치의 재구축이며 정치 본래의 기능인 포괄적 의미에서 민족동화와 발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 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나카소네가 주장하는 정치이념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인데 이는 전후 패배의식에서 탈피,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일본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른바 신보수주의적 사고를 태동시켰다고 보여진다. 특히, 청년층의 보수화를 포함

30) 大嶽秀夫, “中曾根政治のイデオロキーとその國內政治的背景,” 『同人誌レウアイアサン特輯: 新保守主義の擡頭』(1987年 第1號), pp. 73~91 참조.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p. 65~66에서 재인용.

한 일본사회 전반의 보수화 경향과 더불어 이러한 나카소네의 신보수주의 정책노선은 일본국민의 대체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자민당의 장기집권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³¹⁾

나카소네는 경제입국 일변도였던 일본의 보수정치에 신보수주의의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그는 1986년부터 5년간 매년 4%씩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를 위한 자위대 파병을 처음 거론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의 통과를 일본 정치의 보수화 경향을 뚜렷이 노정시켰는 바, 자위대 해외파병을 계기로 「전쟁포기,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의 부인」을 선언한 일본헌법 제9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헌법개정론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신보수주의 세력이다.

「보통국가론」(normal power)을 주장하는 오자와 이치로 전 자민당 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는 「비무장 중립론」을 배격하면서, 헌법 제9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도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즉, 유엔의 무력행사에 자위대가 참가하더라도 이는 유엔 행동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주권 발동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헌법 제9조가 포기한 전쟁, 무력행사와는 상이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전쟁을 포기한 헌법도 전투행위를 행하는 유엔군에 부대를 파견, 참가시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의 「해석개헌」을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최근에 하타·오자와과는 제9조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³²⁾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미쯔즈키 정조회장, 가지야마 간사장, 와타나베 전의상, 하타·오자와과 등 신보수주의 세력들에 의해 헌법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헌법개정의 논리는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고 자위대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9조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1992년 1월 1일 연두사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에 의한 자위대 파병에 대하여 오자와 위원회에서 논의 되어온 헌법개정과 해석변경을 지지하였다. 「아사히신문」은 사실을

31) 앞의 책, p. 71.

32) 외교안보연구원, 「일본의 헌법개정 논의」, 주요국제문제분석, 1993년 2월 24일, p. 7.

통해 “자위대를 배제한 일본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완곡한 반대 내지는 조건부 찬성론이라 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의 사실은 오자와 조사회의 보고서를 “일본을 비군사 경제대국에서 군사적 역할도 맡는 보통대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과거문제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은 채 이러한 발상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평하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오자와 조사회의 제언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통해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1991년 초 헌법연구회를 조직,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였다.³³⁾

한편, 일본의 중의원인 이시하라 신타로와 소니사 회장인 모리따·아끼오는 공저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³⁴⁾에서 “미국이 무리한 일을 일본에 강요한다면, 세계 가운데 일본이라는 좌표를 정하고 과감한 선택을 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강대국 일본의 입지를 명백히 토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을 대변하는 신보수주의는 일본의 주체성(identity)를 재정립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핵심은 경제사상보다 정치사상에 있다. 즉, 전후 보수주의가 지나친 경제위주, 이권위주, 현실생활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소위 금권정치 병리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 증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사상 강화와 국민의식개혁 발상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카소네 등 신보수주의자들은 신보수주의적 사고를 정당, 관료, 재계는 물론 매스미디어까지 동원하여 국민적 합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국제안보·정치·경제면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현존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것은 아니다. 현 미야자와 수상은 현행헌법 고수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여론도 그러한 선택을 견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과연 일본은 어떠한 역할과 노선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조셉 나이(Joseph Nye, Jr.)의 주장³⁵⁾을 참고로 하여 고찰해보자.

33)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p.77~78.

34) 石原慎太郎 著, 金容雲 解説, 「No라고 말할 수 있는 日本」(서울:韓國能率協會, 1990) 참조.

35) Joseph S. Nye, Jr.,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No.89 (Winter 1992-93), pp.107~109. 이외에도 Takashi Inoguchi, “Japan’s Foreign Policy in East Asia,” *Current History* (December 1992), pp.407~412 참조.

첫째의 선택은 「정상적인 강대국」(normal superpower)으로 가는 군사대국으로의 길이다.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의 선택은 상기한 신보수주의 세력내의 강경파와 일본내의 극우적 민족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것이지만, 당장 실현하기에는 국내외의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평화지향적 여론, 일본 식민통치를 경험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가의 반대, 미·일안보조약의 전면적 폐기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기한 것처럼 미국의 경제력이 더욱 약화되어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거나 러시아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증강되거나 북한이 핵무장을 확실히 실시한다면 일본은 재무장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언제라도 가능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의 선택은 「경제주의 내지는 GNP주의」(economism or GNP-ism)이다. 이는 전후 일본이 계속 추구해 온 요시다 독트린의 근간이 된 것이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노선은 일본의 경제력이 비교적 미미했을 때는 무임승차국(free-rider)으로서 용인될 수 있지만, 경제대국이 된 지금 일본이 이기적으로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collective goods)의 창출에 공헌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미 미국과 EC는 일본이 GATT협상에서 방관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개방적인 무역체제 속에서 일본은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의 선택은 「지역주의」(regionalism)이다. 일본은 국제적 역할을 제한하고 더욱 더 많은 에너지를 아시아지역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국수주의적 일본인들은 이미 일본 외교정책의 「재아시아화」(re-Asianization)³⁶⁾를 주장하기도 한다. 일본의 지역정책의 구상은 두개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 바, 하나는 일본이 아시아정책을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태평양 세계주의」(pacific globalism)의 입장이다. 이 노선은 현존하는 아·태 각료회의(APEC)에 중점을 두어 미국과 협력 속에서 일본이 보조적 역할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에 속하는 일본은 구미의 서양 각국보다는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과 더 긴밀한 공동체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재아시아

36) 전전의 아시아주의의 특징에 대해서는 入江 昭 著, 이성환 옮김, 「일본의 외교」(서울: 푸른산, 1993), pp. 156~161 참조.

아화」의 입장이다. 이 경우 일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배제하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를 적극 추진하고 거기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추구할 것이다.

「태평양 세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아직도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과거에 대한 주변국들의 적대감 해소를 완전히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주도하고 지배할 수 밖에 없는 지역공동체의 추진은 국내외의 지지와 용납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유럽과 북미에 절대 시장을 갖고 있는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지역화를 추진할 때 일본이 이익에 위배되는 역작용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시아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의 공동체 결성이 아시아에서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유이며, 또 일본은 다른 아시아 각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통합함으로써 과거에 진 빚을 갚는데 노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⁷⁾ 이 주장은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사과하고 투명성(transparency)을 보일 때에 만이 주변국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민간부문과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제한된 형태의 지역주의를 이미 일본 외교의 일부분으로 추구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움직임이 배타적으로 되어, 일본이 EAEC에 치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EC와 NAFTA가 배타적으로 될 것인가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네번째의 선택은 「정치대국화」의 길로서, 세계적인 경제적 역할에 상응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재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는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엄청난 비용을 요하므로 언론인 후나바시 요이찌가 주장한 것 처럼 현재로서 가능한 선택은 이른바 「범세계적 문민국가」(global civilian power)가 되는 것이다.³⁸⁾ 즉, 범지구적인 빈곤문제, 환경문제, 마약문제, 에이즈문제, 핵확산방지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여타 선진국과 함께 공동보조로 상기 이슈에 맞는 국제레짐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이다.

이러한 네가지 대안 중에서 일본이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태평양 세계

37) 한승주, 「일본의 외교정책」,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서울:나남, 1992), pp. 494~495 참조.

38) Yoichi Funabashi, "Japan and the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91/92), pp. 58~74 참조.

주의」 또는 「범세계적 문민국가」의 길일 것 같다. 물론 이런 선택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일본은 우선 과거사 문제에 좀 더 솔직해져야 하며, 국민들의 태도도 편합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되어야 하며, 국내시장도 여타 국가에 적극 개방해야만 한다. 이런 태도를 취할 때에만 주변국가들의 우려나 의구심은 점차 해소되고 일본의 정치적 지도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한 바처럼 일본내의 신보수주의 세력의 강화는 「군사대국화」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냉전 종식 이후 경제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통상문제를 둘러싼 미국, 일본 및 EC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갈등은 더욱 더 높아만 가고 있다.

모델스키(George Modelski) 등의 장주기순환이론(Long cycle theory)³⁹⁾이나 길핀(Robert Gilpin) 등의 패권적 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⁴⁰⁾가들은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경제력에 의한 국가간의 힘의 변동은 결국 범세계적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16세기 이후 100년을 주기로 세계를 주도했던 헤게모니 국가가 있었고, 세계 역사에는 헤게모니 국가의 부침과 관련한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고 하며, 세계 역사는 이런 헤게모니 국가의 등장, 성장, 팽창, 쇠퇴의 역사라는 것이다. 또한 헤게모니 국가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막강하여 국제적인 공공재(collective goods)를 제공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수 있을 때 세계는 안정된 질서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80년대 이후의 세계에 적용시켜보면, 전후 세계적인 지도국(world power)이었던 미국이 경제력의 약화로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어 모델스키가 주장한 바와 같이, 100년 단위의 한 사이클 중에서 제3단계인 「힘의 비정당화」(delegitimation)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 같다. 이 단계에서 헤게모니국은 각국의 민족주의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점차 세계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UR협상을 둘러싼 미국, 일본, EC간의 마찰과 각국의 보호주의적 경향 등은 공공재를 제공해왔던 헤게모니국이 약화됨에 따라 각국이 이기적인

39) George Modelski, "The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the Nation-Stat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0, No. 2 (April 1978), pp. 214~235; George Modelski,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7) 참조.

40)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Charles P. 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참조.

독자노선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국가간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기적인 행위자(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자국의 배타적인 이익만을 주장하지 않고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진다. 결국 "국제관계의 특정 쟁점영역을 둘러싸고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의 총체"인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⁴¹⁾을 결성하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교환하고 신뢰구축을 통하여 서로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확인함으로써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인 듯하다.

오늘날 미국의 경제력이 점차 쇠퇴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제력이 강화됨에 따라 미·일간에는 무역문제, 구조조정문제(SII), 차세대전투기(FSX)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등장 이후 관리무역을 강조하는 등 대일통상압력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나 일본내에서는 더 이상 동맹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고가 점증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내에서는 소련의 변화로 대소봉쇄전략의 동맹국으로 필요했던 일본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더 이상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안전보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 더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이른바 수정주의자(revisionist)들의 주장은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 배격(Japan-bashing)운동이 고조될수록 드세어질 것이고,⁴²⁾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신보수주의 세력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특히, 중국이 경제개혁에 성공하여 점차 강대국화될 수록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 같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해보면, 최악의 사태가 오기전에 빨리 핵확산금지

41) Stepha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pha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2.

42) Clyde Prestowitz, Chalmers Johnson, James Fallows 등이 대표적인 수정주의자 들인 바, 이들은 일본의 자본주의는 여타 서구 자본주의와 그 성격이 다르며, 이 차이가 미국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Joseph S. Nye, Jr., *op. cit.*, p.102; Chalmers Johnson, "Japan in Search of a 'Normal' Role," *Daedalus* (Fall 1992), pp.1~34 참조.

문제, 군축문제 등 특정 이슈별로 국제레짐을 결성하여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하며, 이것을 기반으로 아시아에서도 유럽의 CSCE와 유사한 「아시아안보협력기구」(CSCA)를 서둘러서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각국간의 이해가 달라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경제협력중심의 「아·태 각료회의」(APEC)을 정치·안보 분야까지 확장시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안보기구가 구성된다면 일본을 일정한 틀 속에 묶어 둘 수 있고 역내 국가들의 군비증강 추세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과 같은 약소국으로서는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1990년 4월 고르바초프의 방일시 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일본도 미야자와 수상이 91년 7월 동남아국가연합 확대외무장관회의(PMC)에서 아·태 지역에서의 아시아안보포럼 창설을 제의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아직까지는 러시아, 중국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안보기구에 대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자간 동맹관계에 기초한 기존 이익과 영향력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아시아 국가의 이질성과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내세워 유럽식의 안보협력기구는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냉전이후 시대의 국제조류와 국내경제 약화 등으로 「집단개입정책」을 통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미국은 아시아에서 안보공약을 축소하고 점진적인 군축의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다자간 안보포럼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교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시아에서 중간적인 힘을 갖고 있어 군비팽창과 패권에 야심이 없는 한국이 이러한 안보포럼구성을 적극 권유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하위기구로서 한반도 관련 4강과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동북아안보협력회의」(Security and Cooperation Conference for Northeast Asia)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냉전 종식 이후 불안정해지는 동북아질서를 새롭게 재조정해야 하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제반 문제들이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대화를 통하여 사전에 갈등 발생을 방지하는 예방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지역내 신뢰구축 및 군비경쟁 방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에서도 다자간 안보협의체는 요청된다. 그

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당장 구성되기 어렵다면, 동북아시아에서도 핵확산 방지문제, 역내군축문제 및 해로문제 등 잇슈별로 관련 국가들끼리 「레짐」을 결성,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내 국가간의 안보적인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안보레짐(international security regime)이 구성될 때 이기적인 국가들도 신뢰구축을 통하여 군비경쟁이 아닌 군축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이 결국 국가간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인 진단을 내린다고 해서 갈등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즉, 인간은 주어진 구조적 조건에 결박당한 채 보복의 악순환만을 마냥 반복하는 환경의 희생자 만은 아니다. 오늘날 국가가 처한 상황이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죄수의 딜렘마(prisoner's dilemma) 상황만은 아니며 레짐의 구축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코헤인(Robert Keohane)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⁴³⁾의 주장처럼, 이기적인 국가들도 제도안에서 자국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타국의 보복적인 대응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상호주의(reciprocity)를 통한 타협만이 서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레짐의 구축이후에는 국가정책의 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양질의 정보를 모은 정보망의 조직이 가능해지며, 국제 레짐의 재원칙이 국가 사회내에 내면화 되면 정책의 예상결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 국가 사이의 정책조정이 없이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호의존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국가간의 협력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러한 신뢰구축과 상호협조를 통하여 대규모의 군비경쟁이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간의 갈등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레짐의 창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IV.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

일본은 냉전 종식의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을 배경으로 전세계

43)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 Westview Press, 1989), Ch.1 참조.

와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 수행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0년 9월 가네마루 자민당 전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사회당 공동대표단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한반도에서 남·북한 양측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는 일본에게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아시아 대륙으로의 침략경로 혹은 아시아 대륙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존재해 왔다. 일본인은 오랫동안 한반도를 「일본의 옆구리에 들이대는 단도」로 보아 왔으며, 따라서 일본의 적대적인 세력이 한반도에서 패권을 잡는 것을 가장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평화적이고 일본에 우호적인 정권이 한반도에 존속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⁴⁴⁾

이러한 일본의 한반도관에서 유추해보면 일본은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둘째, 일본에 대해 적대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셋째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여진다.⁴⁵⁾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두개의 한국」이라는 평화공존 상태의 유지가 일본의 이익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또한 남북한간의 통일노력과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한반도 인식이 보장되는 선에서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만족할만한 선행조치를 취해야 하며, 한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이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더우기, 일본은 한국의 점증하는 국제적 지위 향상과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한국을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일본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 혹은 경쟁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하에서 한국과 정치·경제 및 안보면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

44)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370.

45)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4, No. 1 (Spring 1992), p.33.

상화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독립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일본과의 역할 분담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점차 증대시키려는 듯하다. 일본은 전후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한반도에서 한국 우선정책을 지지해 왔으나,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한 전체를 고려하는 대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시도함으로써 남북한 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모색해 왔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남북한 양측에 영향력을 유지시키려는 일본이 통일 한국을 지지할 것인가? 물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내에 두개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첫째는 평론가 다케무라 켄이치가 「일본의 비극」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통일 한국에 대한 우려론 또는 견제론이다.⁴⁶⁾ 이들은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초래될 수 있는 지역 불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남북한의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첫째, 통일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우기 통일 한국이 핵 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또한 남북한 모두 일본을 혐오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통일되면 반일감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통일후의 한국과의 무역경쟁이 더욱 과속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즉, 통일 한국은 근면한 노동력과 6,500만 인구의 높은 수준 및 방위비 감소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강국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재벌은 러시아나 중국이 투자를 바라는 분야, 즉 자동차를 포함한 소비재분야와 건설분야 그리고 중공업 분야에 상당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서 일본에 위협이 되며, 미국의 대일견제 또는 대일압력을 위한 대안적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은 일본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반도를 통제하기 위해 통일된 한국보다 분단된 남북한상태가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46) 竹村健一, 「日本の悲劇」(東京: 祥傳社, 1991).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 393에서 재인용.

둘째는 사토 세이자부로 교수 등이 주장하는 통일 한국 지지론의 입장이다.⁴⁷⁾ 이들은 통일 한국이 공산주의를 택한다면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분단을 선호할 수 있지만, 세계 조류에 비추어 공산화 통일의 가능성이 희박한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할 한반도의 통일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통일 한국이 보유하게 될 군사력도 민주주의 한국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게 될 것이며, 군사적 관심의 초점도 일본보다 국경을 접하게 되는 러시아 및 중국에 더 치중하게 되고 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취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할 경우 서방측의 일부로 잔류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방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을 견제해 주는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경제적 위협론에 대해서도 한국인은 일본을 따라잡고 싶어하고 이러한 욕구가 통일을 이루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통일 후 수년간은 북한의 재건에 몰두하게 되어 일본이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한국의 경제는 일본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고 낮은 기술 수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넘기 어려운 장애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일본과 통일 한국의 경제적 경쟁은 일본 경제 및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건전한 것으로서, 일본과 한국은 세계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경제적 동반자가 되어 세계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남북한 등거리외교 경향을 보면, 현재로서의 일본은 하나의 통일된 한국을 관리하는 것보다 양면카드를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 두개의 분단된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의 평화적인(분단된) 공존 상태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급격한 통일 과정과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 한국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은 탈냉전의 국제적

47) 사토 세이자부로(佐藤誠三郎), “한반도의 통일과 일본의 역할,” 『일본평론』, 제4집(1990년 가을), pp. 146~50; 사토 세이자부로, “국제관계의 변화와 한일관계의 장래,” 『일본포럼』, 제16호(1993년 봄), pp. 178~179 참조.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남북한 관계진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불안정(혹은 급속한 통일)상태가 유발될 것과 일본의 영향력이 여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대북한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대남북한 등거리정책에 대비해야 하며, 일본으로 하여금 좀 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적극 나서주도록 촉구해야만 한다. 그러한 방법을 위해 모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일본의 대북한접촉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특히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조속한 수교나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북한 수교이후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한 경제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의 한계를 명백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경제원조가 점차 북한의 경제재건을 돕고 일본 자본을 통해 서서히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중국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일본 자본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성격과 그 변화양상을 국제적 역할 증대라는 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또한 그러한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냉전 이후의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냉전시대 처럼 어떤 정형화된 구조 속에서 각 국가가 확실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러한 정형화된 구조를 찾아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으므로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은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도 크게 노정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력 약화로 인해 동아시아에 있어서 세력균형자 또는 궁극적인 안전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점차 개입축소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 개방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감과 아울러 군사력 또한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불확실한 위기의 과정 속에 처해 있으며 아직 확실한 정치·경제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매우 불투명하다. 북한도 극심한 경제난과 권력 이양기라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국내 정치·경제체제가 극도로 불안한 실정이며, 핵무기개발 의지는 더욱 더 불안과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냉전이후의 불확실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80년대 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독자적인 자위능력 향상을 위해 군사대국화의 길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일본의 선택은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변화되는 경우, 즉 미국의 안정보장자로서의 공약이 불확실해지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개발이 명백해질수록 가일층 가속화될 것이다.

과거의 식민통치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사과를 하지도 않은 일본이 정치·경제·군사적인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정치·경제적 역할 증대에 대하여는 한·일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별적으로 용인하지만, 군사적인 역할 증대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 대상국이었던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도 비군사적이고 인도적인 분야에 국한되도록 촉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를 확실성의 관계로 정립하기 위하여는 핵확산 방지문제 등 잇슈별로 국제레짐을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집단안보기구나 동북아안보협력회의 등을 결성함으로써 국가간의 신뢰구축을 통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동북아의 군축문제 등을 달성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한국은 적극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강대국간의 각축 속에 있는 약소국은 집단안보체제 속에서 강대국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세계질서 속에서 힘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서라도 한민족의 통일의 당위성은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